

# 李 “추경이 중요한 수단”… 權 “협치가 가장 중요”

이재명

권영세

## 여야정 국정협의회 '4차 회담'

이 “주52시간 예외 유연한 태도 필요” 권 “野 예산 일방처리 분명히 잘못돼” 우 의장 “추경 합의 국정안정 신호탄” 權 대행 “반도체법 지체할 시간 없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여·야·정 대표가 모인 가운데 개최된 국정협의회 '4차 회담'에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시급한 민생 현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회담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민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분야는 다름 아닌 정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치”라며 “쉽지 않았지만 서로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는 삼권 분립 원칙을 지키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처리한 것은 분명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간섭이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더 이상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민께서 고통받지 않게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방법 중 추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

다.

이 대표는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할 수 있는 대로,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대로 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국민을 위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제통상 환경이 악화해 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 모두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통상위원회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책을 논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 문제나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중 ‘주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것 안 되면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의 오해로 이게 계속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안 할 이유는 없다”며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은 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제 전반에 적신 호가 커졌고, 민생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국정협의회가 죽을힘을 다해 국민만 바라보며 결실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특히 “국민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추경 합의일 것”이라며 “그 자체가 국정 안정의 신호이자 경제 심리 회복의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여당에서도 민생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야당 역시 규모와 항목을 야당 안대로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쟁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문

제의식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걱정이 정말 크다. 정치 사회적 혼란과 민생, 대외환경까지 내우외환의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국정협의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 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근로 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주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 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광주·전남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114명 후보 등록

### 광주 35곳 48명·전남 50곳 66명

다음달 5일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총 11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20일 광주·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에 광주 35개 금고에 총 48명, 전남 50개 금고에 총 66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광주 지역의 평균 경쟁률은 1.4대 1, 전남은 평균 1.3대 1을 기록하는 등 이번 선거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20일부터 오는 3월4일까지 위탁선거법이 정한 선출 유형(직선, 대의원회)에 따라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직접 소통은 물론,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의 해당 활동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는 오는 24일까지 각 금고 주사무소 게시판에 부착되고, 25일까지 선거공보가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오지현·정성현기자

## 이재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방문 현대차 “한미 외교 강화” 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국제통상 환경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자동차 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정부·정치권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 일자리 확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그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입법을 해왔지만 기존 지원 체제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도 국내에서의 생산을 장려하고 국내 산업 보호

를 위해 국내 생산에 대해선 세액 공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며 “적절한진 모르겠지만 이름은 국내생산 촉진세제라고 생각한다. 공제제도라고 해야될지 촉진세제라고 해야될지, 뭐라고 부르든간에 국내생산 촉진하기 위한 세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대차 측은 현재의 상황 진단과 함께 전기차 분야 지원 유지, 투자 애로사항, 수소 생태계 경쟁력 확보, 수소 충전소 확충, 미 대외 정책 집행과 관련한 한미 의원 외교 강화 등을 민주당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한국 자동차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 법률대변인인 이견태 의원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1월 우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줄었고 트럼

프가 미국 산업 보호와 미국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들을 매우 강력하게 발표·시행하면서 우리 수출을 제한하는 여건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으로서 우리 주축 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이 대표가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대차 측은 각국이 자국 보호무역으로 방향을 틀면서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선 내수기반도 중요하니 내수기반 활성화에도 정치권이 신경 써달라고 했다”며 “또 미국이 힘으로 통상경쟁국들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대에는 힘이 부족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고) 속도가 중요하다. 정치권이 발 빠르게 업계 요구에 부응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박선원 “707단장, 성일종에 해외파병 인사청탁”

### 국방위서 ‘계엄군 회유’ 의혹 공방 성 위원장 “지휘관 모독… 말조심”

여야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관들에 대한 각 정당의 회유 의혹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겨냥해 “김현태 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유니필(유엔평화유지군·UNIFIL) 등 해외파병부대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나”라며 “(성 위원장과 김 단장 사이에) 회유의 거레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최근 성 위원장을 만나 ‘지난해 12월 5일과 10일 각각 두 차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광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07 특임부대가 휴대한 케이블타이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김 단장의 ‘인사 청탁’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성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이야기하라.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며 “아무리 그래도 한 지휘관을 그렇게 모독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어떡할 것이냐. (김 단장과 의 면담 내용 관련) 녹음을 다 풀어서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 책임질 것이냐”며 “말조심하라”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정보 Q&A

Q.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A.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임한 1명(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인 2월20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 날인 3월4일까지입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등록일인 1월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한 경우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Q.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선거운동인가?

A.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예비)후보자의 지인인데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소속 새마을금고 회원에게 전송해도 되나요?

A.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이 아닌 제3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